

5·18 진상규명위 설치 준비 TF 가동

국방부, 6개월간 발족 준비 업무 수행... '5·18헬기 사격·전투기 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 후속조치 업무도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5일부터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같이 밝힌 뒤 "TF 운영은 특별법 통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TF는 국방부 내에 별도의 사무실에 설치돼 앞으로 6개월간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TF는 현역·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되고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시행령 등 각종 하위 규정 제정, 예산 확보 등 진상규명위 발족 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TF는 법 공포 후 진상규명위 설치 준비를 위해 부여된 6개월 이전이라도 진상규명위 설치가 가능하도록 준비 작업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진상규명위 설치 이후에도 국방부의 협력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진상규명위와 정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TF는 5·18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5·18특조위)의 후속조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TF는 5·18특조위가 수집한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진상규명위와 관련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민과 광주시민의 여망인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역사적 아픔치유와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5·18 특별법의 핵심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집단 학살 등 강제진압, 인권유린 행위와 시신 압매장, 전투기 출격대기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위 설치다.

진상규명위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여당이 추천하는 4명,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야당에서 추천하는 4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활동을 한다.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진상규명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 채택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

김관영 의원, '승강기 추락사고 방지법' 대표발의

승강기 간힘이나 추락 사고로 피해를 보는 국민을 대폭 줄이기 위해 시설 안전점검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27일 '승강기 추락사고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승강기 하중 검사를 확대하고 노후 승강기의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발의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가 10년이 지난 승강기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종합 검사의 성격을 띠는 수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노후 승강기(완성 후 15년)가 되기 전까지 심도 있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 사고에 취약했다.

노후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년에 한 번 정밀 검사가 진행된다.

승강기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도 5년에 1회 이상은 하중 검사를 하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그동안 자체 검사에는 하중 검사가 빠져 있었다. 승강기 하중 문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관영 의원은 "승강기 추락과 같은 불의의 사고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촉촉하고 세밀한 승강기 점검으로 '안전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우원식 "공직선거법 처리 무산 한국당 무책임 그 자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동너', '무책임 그 자체' 등 단어를 인용해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주요법안들이 한국당의 비타협적 태도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관리위원회 관련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지난해 연말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비리사학의 먹튀방지를 위해 여야 합의로 교편위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에서 좌절됐다"며 "여야 당 차원의 합의는 물론 비리사학 단죄 요구 목소리를 외면한 법사위의 수퍼갑질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적폐"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똥으로 공직선거법(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지도부간 합의조차 어그러트린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은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힐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남은 중요한 숙제인 개헌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협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 "지난 1월 독자적인 개헌안을 2월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색깔론 시도를 하는 것을 보면 무산 당론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 개헌안에 속도를 내자"고 요구했다. /뉴스



지난 2일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남원과 임실, 순창 지역에서 무소속 연대를 구성해 특정 정당 패권에 맞서고 지역을 살리는 미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남·임·순 무소속 연대로 특정 정당 패권에 맞서"

이용호 의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소속 연대로 치를 것"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이 무소속 연대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이용호 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남원과 임실, 순창 지역에서 무소속 연대를 구성해 특정 정당 패권에 맞서고 지역을 살리는 미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지방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에게 묻지마식 몰표가 행해졌던 것이 사실이다"며 "기득권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 마련이고, 많은 주민들이 지역이 낙후된 데에 책임을 묻고 인물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개 시군 전 지역에서 단체장 후보는 물론 시도의원 후보자도 배출할

수 있는 무소속 연대의 틀을 마련 중이다"며 "이 구성에는 '시민 연맹'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발전 차원에서 결정적인 정치적 사건이 될 것이다"며 "어려운 길이지만 오로지 지역만 보고 흔들림없이 대처해 반드시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김중회,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확정안 거대 양당 적대적 공생관계 재확인

민주평화당 김중회 의원(김제, 부안)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 지난달 28일 확정된 광역의원 정수-선거구는 법정 시한을 두 달 보름이나 초과하면서 조속으로 이뤄져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및 '양당 중심제의 구조적 폐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은 말로만 '지방분권'과 '전북 사랑'을 외칠 뿐 전국적 차원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해 전북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확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중심이 된 여야는 28일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를 열어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확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늘린 690명으로 조정했다.

또 자치구·시·군 등 기초의원 총 정수를 기존 2898명에서 2972명으로 29명 늘렸다.

초미의 관심사인 전북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는 전주지역이 2석 증가한 대신 부안지역 선거구가 1석 감소했다.

광역의원 정수는 전국적 차원에서 27명이 늘었지만 전북지역 차원에서는 고작 1석이 늘어났는데(34석에서 35석) 전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현역의원 숫자를 앞세워 정개특위 논의를 주도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에서 전북 비중은 3.7%(27분의 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거대 양당은 전북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전북 확대 전략'을 구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득권을 가진 거대 양당 입맛대로 추진된다고 조속으로 이뤄졌으며 전북을 비롯한 도세가 약한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고 농촌지역의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 도시지역의 지역구를 크게 늘린 도시중심형 선거구 확정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동료 국회의원과 지역주민들과 연대해 개정안 저지에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